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

아.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죄

자. 「형법」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벌칙)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‘특정범죄’의 적용범위는 강력, 마약범죄,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, 업무상 횡령·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‘현대형 범죄’의 경우,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‘특정범죄’의 적용범위에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,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죄 및 「형법」 제114조(범죄단체조직죄), 제289조(인신매매죄)를 추가하는 한편,

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,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 제17조제2항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권한대행

국 무 총 리

황 교 안 ㉠

2016년 12월 20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
국 무 위 원

행정자치부

장 관

(법무부 소관)

홍 윤 식

●법률 제14414호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제2항 전단 중 “부착하여야”를 “부착하여야 하고,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, 부과된 준수사항(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)을 준수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,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하거나 준수사항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권한대행

국 무 총 리

황 교 안 인

2016년 12월 20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
국 무 위 원

행정자치부

장

(법무부 소관)

홍 윤 식

●법률 제14415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)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